

1992. 01. 12

정신대 공식문서 발견 의미

제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관리 및 중군위안부(정신대) 모집을 직접 지시·감독·통제했음을 확인해주는 당시의 군 문서가 일본 방위청에 보관돼 있음이 11일 확인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중대한 계기를 맞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정신대 문제에 대해 "민간업자가 한 일이며 국가기관이나 군이 관여했다는 단서는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일본 정부의 가장 진전된 자세로는 가토 고이치 관방

성은 "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 사정을 들은 결과 후생성·군로국도·국민근로동원서도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세 문서는 정신대에 군과 국가가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해준 최초의 정부 공식문서라는 점에서 일본으로서 는 더이상 부인하기 힘든 명백한 증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확인된 자료들은 일본의 패전 직후 연합군에 압수돼 워싱턴에서 보관돼오다 58년경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한·일의 모든 청구권 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일괄 타결돼 완전 소멸됐다"는 일본쪽 논리에 대한 전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많은 국내 전문가들은 물론 이번 자료를 발견한 일본 주오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 등은 우선 "한·일협정으로 개인적 청구권이 없어졌다지만 국가대 국가의 보상과 개인대 국가의 보상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법학자인 백충현 교수(서울대 법대)는 "한·일협정과 같은 국가간의 일괄타결 방식은 국가가 피해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을

자료존재 알면서 발뺌 가능성 정부 더이상 우물쭈물 말아야

장관이 지난해 12월12일 "중군위안부로 일시킴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들 수 있으나 이조차도 "사실확인 조사를 지시했다"는 정도였으며, 김학순씨 등 옛 정신대원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요구 소송을 낸 뒤에 나온 방어적 성격의 발언이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사자들의 잇따른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정부의 직접개입을 확인해주는 공식문서상의 증거가 없었던 데 힘입은 것이다. 91년 4월에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속에서 한인 정신대원으로 보이는 명부가 발견됐지만, 노동

일본 방위청 전사자료실로 옮겨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 문서의 존재를 이미 알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자료가 발견된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의 자료담당자도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번 자료의 발견으로 새롭게 떠오른 한인 정신대 문제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미야자와 일본 수상의 한국방문 때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이미 소송이 제기된 정신대 피해보상은 물론 징용·징병 등 다른 식민지배 피해배상 문제에서도 큰 논리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흡수해 함께 요구하는 일종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피해자의 본국이가해국에 대해 자국민의 권리구제에 소극적일 경우 가해국은 국제적 교섭의무를 지지 않게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간의 일괄협정으로 개개인의 피해보상이 완전히 종결됐다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의 인권은 여전히 국제법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남게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청구권 협정과 별도로 국제법상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피해자 개개인의 보상요구는 가능할 뿐 더러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위해 추가보상교섭을 요구해

慰安所ハ所管警備隊長兼憲兵隊長
督下ニ警備地ニ將校以下ノ爲門
シメテリ
近來各種慰安設備(食堂、浴室、其他)增加ト共ニ軍慰安所ハ逐次衰微ニシテ
現在從業婦女數概ニ千名内外

광동지역 일본 제21군(파집단군) 사령부의 '위안소 상황에 대한 보고' 첫줄에 "위안소는 소관 경비대장 및 헌병대 감독하에 경비지구내 장교 이하를 위해 개업했음"이라고 적혀 있다. <아사히신문 게재·동아일보 제공>

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연방보상법·연방반제법 등으로 민간인의 전시피해보상을 실시한 전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의 윤

문제에 대해 사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8만~20만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정신대 문제를 구체적인 피해보상과 사실인정이 아닌 사과선에서 마무리짓는다면 한·일협정에 이은 또다른 역사적 과오로 남을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주장이다. <여현호 기자>

해동 연구원은 65년 일본으로부터 전달받은 2만명, 지난해 3월 받은 9만명 등 군인·군속·강제동원자 명부가 제대로 공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민간인 피해의 사실화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화인을 위해서라도 명부의 분식과 공표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일제 식민지배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던 한·일 기본조약의 개정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오는 16일의 한국방문에서 정신대